

충남에 이런 화력 발전소가...

조성준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다 보니 당장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이나 그린피스의 보고에 따르면 당진을 비롯한 충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24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증설 할 경우 충청·수도권 등의 초미세 먼지(PM2.5) 평균농도가 입방미터 당 최대 19마이크로그램($19\mu\text{g}/\text{m}^3$) 증가되어 조기사망자가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중 암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와 충청남도 등 4개 시군이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공동으로 55억원을 부담하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조사·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 필요합니다.

최근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중앙정부는 30~40년 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는 부품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고 미세먼지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만 임시 처방식의 대응입니다. 중앙정부는 전국토를 아우르는 큰 그림에서 발전소 문제를 봐야합니다. 물론 지역 간의 이해관계와 전기료 문제 등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갈등문제 등을 설득하고 합의하여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전력생산은 반대합니다. 특히, 충남 지역과 수도권에 배출허용기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만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전력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당진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 발전소를 집중하여 건설한 것은 정부입니다.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발전소의 시설을 개선하는 일에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설치해 왔다면 이제는 전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또 대체 에너지 발전소를 개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어질 발전소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을 도입하는데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봐 온 당진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충남 지역에 구축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에서 수도권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한 충남 지역의 대기 환경을 원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충남은 운영적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 착공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피해에 대해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당진에 대기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시범단지나 연구소를 설치해 대기 개선의 모델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